



# 글로벌시대 함께 사는 선진경제의 길

이영련 |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걱정되는 청년실업

‘이태백’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학교수로서 걱정과 책임감을 느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2007.7)을 보면 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7.6%로 3십5만6천 명이 실업자이며, 대졸이상 전체 실업자는 2십6만7천 명이라고 한다. 만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실업통계에서 빠지는 취업준비자 5십2만6천 명과 취업포기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청년실업률은 이태백은 아니라 할지라도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경기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경기가 좋다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시장의 체감경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국내외 경제예측기관들도 금년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도 환율 하락과 중국의 추격 등 국제경쟁의 격화로 어려운 실정 이어서 금년에는 경상수지도 적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 2007년 10대 세계경제 도전

미국의 부루킹스(Brookings)연구소는 금년 초에 ‘2007년의 10대 세계경제 도전’이라는 제목 하에 ① 에너지와 환경 ② 분쟁과 빈곤 ③ 글로벌시대의 경쟁 ④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 ⑤ 새로운 대국의 등장 ⑥ 중동의 경제적 배제 ⑦ 글로벌 기업과 그 영향 ⑧ 글로벌 보건위기 ⑨ 글로벌 통치의 교착 ⑩ 글로벌 빈곤 등을 제시하였다.

동 연구소는 ‘에너지와 환경안전’을 2007년 글로벌 아젠다에서 첫 번째 이슈로 부각시키고 한정적인 비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수요증대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응집력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정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탄소감소기술에 대한 민간투자의 촉진 등을 주장하고 있다.

‘분쟁과 빈곤’에 대해서는 글로벌 빈곤은 글로벌 분쟁과 ‘죽음의 악순환’(Doom Spiral)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국가적 빈곤은 곧 분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분쟁은 각종의 사회병리현상을 유발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어렵게 하므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의 통합적인 해결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당국의 지도자들이 민주적 국가로 변모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국민들을 위하여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들을 취하도록 통합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글로벌시대의 경쟁’에서는 중국의 수출주도 및 외국인투자 중심의 성장전략은 세계경제에 해일과 같은 영향을 주면서 힘든 도전과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글로벌화의 이득을 강조하거나 또는 보호주의를 호언하기 보다는 무역법규를 개정하고 국내정책을 보완하는 등 예방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글로벌화의 새로운 부정적 파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및 혁신집약적 산업 등 미래 번영의 기초를 놓는 투자를 증대하며, 사회적 이동성(Mobility)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보편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은 지난 해 GDP의 6.5%인 8,500억 불에 이르는 지속적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문제와 중국을 비롯한 석유수출국들의 누적되는 흑자에 따른 불균형문제이다. 외국인들이 미국 채무증권의 약 2분의 1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GDP 대비 대외부채비율이 25%(2005년)로 증가한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급작스러운 자본이탈이 발생한다면 달러화의 절하, 이자율의 상승, 주택 및 증권가격의 폭락, 세계경제성장의 둔화 등을 연쇄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국 위안화의 일정한 율의 절상과 함께 미국의 재정수지적자 개선 및 민간저축의 장려와 유럽과 일본의 성장장려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소위 브라이드즈(Brides)로 지칭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및 중국이 새로운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되고 있는 만큼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해야 하며, 글로벌 경제에서 경제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중동국가들에 대해서 세계적 관심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중동의 국가들은 15~24세의 인구가 지역총인구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다. 반면에 이들의 실업률은 매우 높아 시리아의 경우 청년이 실업자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이들 중동지역 국가들이 교육개혁, 양성평등 등의 정책과 좋은 통치체제로의 급속한 진전이 절실히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글로벌 기업은 세계적인 위험을 완화시키고 기회를 확대함에 있어서 정부 못지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새로운 경제적 기회의 창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글로벌 건강과 질병에 대한 대처, 기후변화와 물부족에 대한 대응, 교육개혁의 지원, 부패척결, 혁신 등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창조적이고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과 협력하여 문제해결

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증대시키고 달성한 성과를 분석하여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보건의 이슈는 국가와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불충분한 보건의료서비스로 고통을 받으면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아직도 세계에서 20억 명이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며, 매년 5억 명이 말라리아에 감염되고 그 중 일백만 명 이상이 그로 인해 죽는다. 세계 여러 국가와 기관들이 글로벌 보건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매년 300~700억 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핵 확산, 다자간 무역협상의 정체, 세계적 조류독감의 위협, 글로벌 빈곤에 대한 전쟁 등 세계가 함께 논의하여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정치역량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글로벌 통치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에 관련된 더 많은 당사국들을 끌어들이 공동의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의 G7 국가들 뿐 만 아니라 브라이드즈(Brides)와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대한민국,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을 망라하는 G 20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글로벌 빈곤문제에 대한 새로운 참여자와 새로운 접근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등의 막대한 금액의 기부와 대규모의 민간구호단체 및 비영리기구에 의한 무담보 소액대출, 자산형성지원 등 새로운 접근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도전과 기회

우리는 이러한 범세계적인 이슈의 해결에 적극 동참하면서 그러한 참여와 협력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당면한 도전과 기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경제성장 잠재력이 저하되고 사회적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양극화현상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경제의 세계화와 글로벌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및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미국을 비롯하여 중남미와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 자유무역의 확대와 적절한 보상정책

세계는 그동안 WTO 체제와 FTA 등 지역경제통합의 확산을 통한 자유무역의 확대에 지속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자유무역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득을 가져오지만 내부적으로는 반드시 손해 보는 산업 내지 사람들이 있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 증대와 수입에 따른 국내가격의 하락으로 얻는 이득으로 적절한 보상정책을 실시하여 손해 보는 사람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소위 자유무역에 따른 보상원리로서 무역이론의 기본원칙이다. 다시 말해서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적절한 재분배정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기본적인 정책 중의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 동안 세계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특히 수출은 1964년의 1억 불에서 지난 해에는 3,255억 불을 달성할 정도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수출의 증가는 국민들의 꾸준한 노력과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확대에 기인한 바 크다. 또한 최근에는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어 경제의 개방화는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의 개방화 및 글로벌화는 필연적으로 국내의 산업 간 및 계층 간 소득의 재분배문제를 야기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포기하고 보호주의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만일 자유무역에 따라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계층에 대해서 국가가 무관심하고 경쟁의 원리만 강조한다면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민주주의와 경제의 역동성이 위협될 수 있다.

## 지식기반경제와 양극화문제

21세기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경제는 급속하게 지식기반경제로 변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는 그 속성상 더욱 많은 산업분야에서 규모의 경제에 따른 자연독점화 경향을 증대시켜 경제적으로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과 사회적으로 소위 중간층이 사라지고 상위 20%와 하위 80%로 구성되는 20대80의 사회로 변모되고 있다. 실제로 세계의 주요 선진국에서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소득분배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IMF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가 양극화되어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10분위배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7에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9로 크게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우리나라 기업만 하더라도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1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는 기업 수가 10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높은 청년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역대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자본자유화에 따른 금융자본은 실물자본을 몇 배 증가하는 규모와 영향력을 갖고 세계적인 부와 소득분배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자산을 통한 부의 증대는 사회계층 간 더욱 큰 부의 격차를 유발하고 있으며, 지난 2001년 이후 세계적인 부동산 붐과 함께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 상승은 지역적 및 계층적으로 엄청난 부의 격차를 가져왔다. 이러한 소득과 부의 급격한 격차 확대는 사회적 안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어렵게 한다.

이처럼 자유무역의 확대와 경제의 글로벌화, 첨단기술의 발전과 지식기반경제의 진전, 그리고 세계적인 자본과 금융자산의 이동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해야 할 도전이고 기회이지만 한편으로는 양극화와 소득의 재분배를 야기하기 때문에 손해 보는 사람을 아우르고 이득을 보는 사람을 더욱 분발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더욱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경제성장을 저해할지라도 세계적인 경쟁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글로벌화에 따른 시장개방의 피해자로서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성장과 국가 전체적인 이득을 위해서 자유무역을 확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고, 합리적인 실행수단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개방을 하지 않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글로벌화의 피해자들을 돕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글로벌화에 따른 고통은 일반적인 고통과 구별하기가 어렵고, 특정한 보호주의 정책은 외국으로부터 보복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보호정책은 해당 산업의 국내 생산자로서는 이득을 얻을지라도 소비자로서, 투자자로서 그리고 미래의 연금수혜자로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

## 글로벌화의 대응과 선진경제


만일 보호주의가 최선의 길이 아니라면 피해자를 돕는 방법으로 조세제도의 사용을 생각할 수 있다. 개방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사회를 덜 불평등하게 할 뿐 만아니라 글로벌화에 대한 국민들, 특히 피해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금을 통한 피해자의 보상방법 역시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다. 우선 과도한 세금은 기업의 해외이전을 촉진하게 되어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정확한 이득과 손해의 계산 자체도 어렵다.

글로벌화에 대한 기본적 대응방법은 기술의 발전을 포함한 다른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목표는 비교우위가 변하는 곳으로 자본과 노동력을 빨리 이동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것은 투자를 촉진하도록 노동시장의 마찰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며, 근로자들의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고용과 의료보험 및 연금체계가 직업을 옮길 때마다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무슨 이유로든 직업을 잃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훈련과 구직활동을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를 사회적 이동성이 큰 사회(Mobil Society)라 할 수 있다. 만일 능력에 따른 성공의 기회에 차별이 없고, 전체적으로 경제성장이 보장된다면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역에 따른 피해자를 직접 돕는 것보다 모든 노동자들의 직업전망을 개선하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유럽에서 덴마크가 이러한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데, 덴마크의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시스템은 탄력적인 노동시장과 실업자에 대한 관대한 지원이 결합된 제도이다. 실직자에게는 종전 임금의 80%까지 지급하면서 재훈련과 부지런히 일을 찾도록 강요하고 있다. EU는 회원국들에게 플렉시큐리티 모델을 채택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또 다른 대안은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직업이라도 갖도록 하면서 “임금보협”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독일에서는 50세 이상의 해직노동자가 저임금 직업을 가질 경우 국가가 낮아진 임금의 50%까지 보전해 준다. 프랑스는 나이제한이 없는 대신 2년까지 보조금 지급을 한정한다. 미국은 무역조정위원회에서 무역으로 인해 해직된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 동안 과거 임금과 새로운 직장의 임금격차의 50%를 2년 간 최고 1만 불까지만 지급한다.

글로벌화는 이처럼 다양한 대응책을 필요로 한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정책, 근로자들의 이동성 제고정책, 그리고 탄력적인 노동시장과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적절히 배합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노동시장을 자유롭게 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직업훈련과 교육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과 훈련기회의 확대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간 및 사회적 이동성을 제고하고, 사회적으로 자발적인 나눔의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하고 깨끗하며 일관성 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며, 국민들 역시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글로벌시대에 더불어 사는 선진경제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

#### 이영련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주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회장, 강원대학교 기획협력처장을 역임하였으며, (사)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 공동대표 및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무역학원론』(공저), 『한국경제』(공저), 『디지털금융경제론』(공저) 등 다수가 있다.